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77
----------	-----

발의연월일 : 2024. 6. 26.

발 의 자 : 백혜련 · 정성호 · 윤종균  
백승아 · 염태영 · 김한규  
박희승 · 이병진 · 김영진  
문진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등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조치를 하게 하거나 주거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판 절차가 종료되거나 수형 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보복 범죄의 발생으로 신변안전조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신변안전조치 기간의 연장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신변안전조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 또는 경찰서장의 직권이나 범죄신고자 등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신고자 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5항 신설).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5항에”로 한다.

- ⑤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신변안전조치) ① ~ ④ (생 략) <u>&lt;신 설&gt;</u>	제13조(신변안전조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제1</u> <u>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기간</u> <u>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u> <u>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범죄신</u> <u>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u> <u>족등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u> <u>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
⑤ 제1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 ----- ----- -----.